

주 52시간 노동제 무력화 말라

조국 놓고 아웅다웅하지만
민주당 정부와 한국당 야당은
노동자 공격에 한통속

관련 기사 2~3, 4면

중국 혁명 70주년

사회주의 혁명인가,
민족해방 혁명인가

8~9면

페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5면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6~7면

감사원의 정규직화 정책 비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4면

ILO 협약 기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4면

- 철도 파업 12면
-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11면
- 집배원 노동자 투쟁 11면
-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10면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김문성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인들은 참가 규모를 여러 곱절 뽐내기하고, “제2의 촛불”, “국민의 뜻”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하며 수사 검사고발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덕분에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우파도 반격에 나섰다. 10월 3일 자유한국당 집회를 중심으로 수십만 명이 광화문 광장과 사거리 일대를 메웠다. 60대 노년층이 다수였지만, 서초동보다 더 많이 모였다. 고무된 우파는 심지어 “문재인 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자극받아 10월 5일 서초동 집회도 더 커졌다. 우파의 극성스런 동원에 반감과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가세한 듯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정경심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는 날이었다.

공식 정치의 분열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현 국면을 차기 총선·대선의 전초전으로 본다. 박근혜 정부가 중도 퇴진으로 끝난 이후 벌어진 공식 정치 양극화의 틈이 더 벌어지고 있다.

지배계급은 박근혜 정부를 헌법적

수단으로 중단시켜, 거대한 퇴진 운동을 공식 정치 안으로 수렴시키고 상황을 ‘정상화’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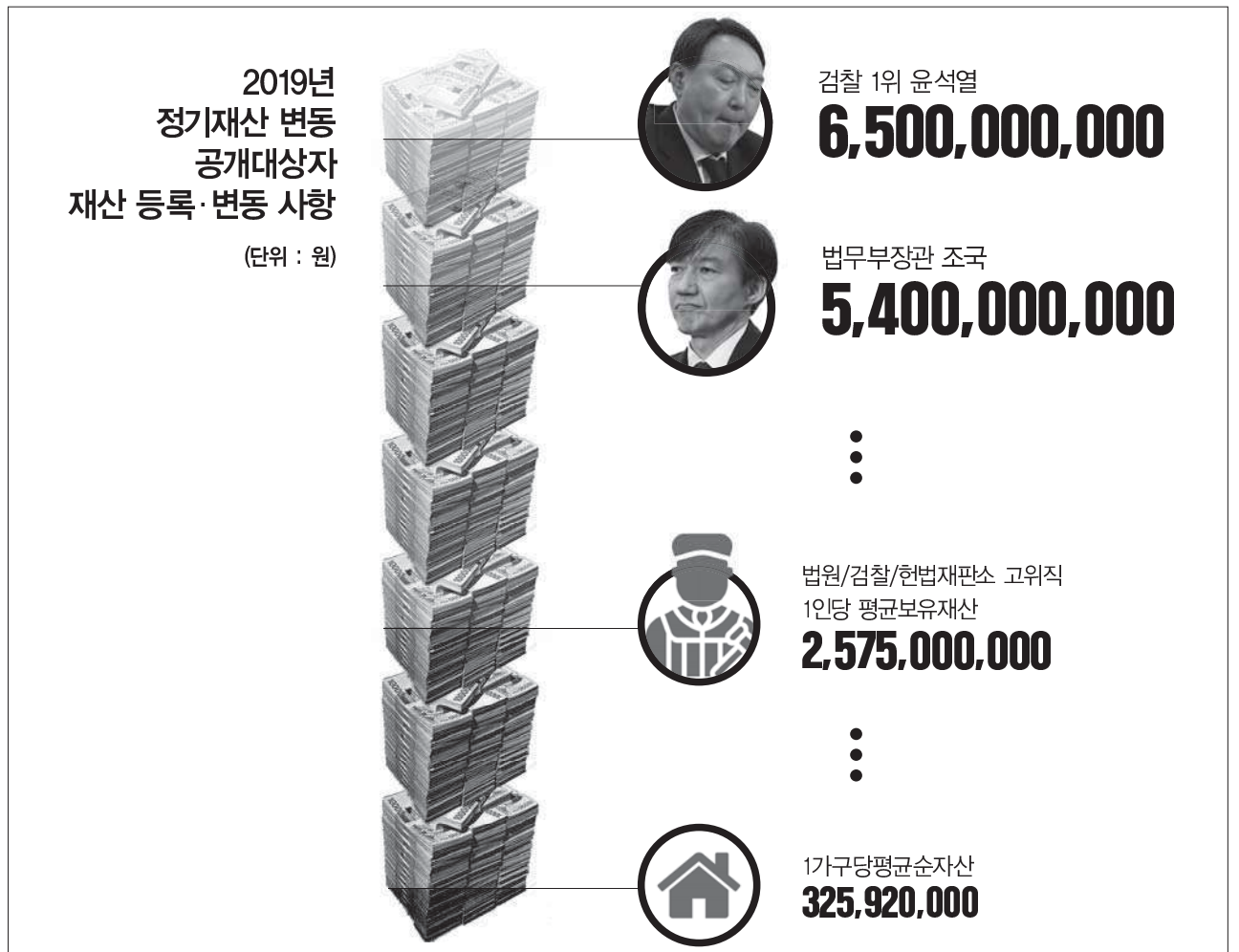
그 덕분에 신뢰를 회복한 듯했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적폐세력 중 가장 미움받는 소수의 숙청에 앞장서 온 검찰과 갈등을 빚고, 국회·법원·검찰 등이 모두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다.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정부를 대중 운동이 몰아낸 덕분에 집권할 수 있었던 정부에서 신흥 권력형 부패가 드러난다면, 정부 자체는 물론이고 공식 정치의 불안정도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공식 정치 양극화와 불안정 심화는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이 세계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 강대국 간 갈등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난관들에 대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것에서 비롯한다. 반도체 등에서 미·중 간, 한·일 간 무역 갈등 등에 얽혀 있고 미국 시장에서 LG와 기술 소송전을 벌이는 SK 회장 최태원은 9월 말 이렇게 토로했다. “회장이 된 20년 동안에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 … 지정학적 리스크는 30년은 갈 것[이다.]” LG 회장 구광모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기”라고 했다.

그래서 지배계급도 초조하고 신경질적인 듯하다. 그들의 정치인들은 상호 부패 폭로, 누가 더 뻔뻔한지를 경쟁하는 식(막말, 내로남불)의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경제 대책 문제는 물론이고 미국·일본·중국·북한을 대하는 문제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서로 불신하고 분열해 있다. 노동 문제를 제외하면 말이다.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고위 검사·판사들은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일부다

최근 기업인들은 공개적으로 문재인을 향해 “경제는 버려진 자식”(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힌 상황”(경총 회장 손경식)이라고 불평했다. 상공회의소는 탄력근로제 개악 등 22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사실 경제적·지정학적·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자 문재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통해 검찰 등 권력기관을 단속하려다가 검찰의 반발과 우파의 반격을 맞은 것이다.

우파가 얼토당토않게 문재인을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는 건 그만 진보 염원 지지층 눈치보기를 끝내라는 압박이다. 그래서 (본지가 거듭 강조해 왔듯이) 문재인은 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주와 중도우파층을 붙잡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은 10월 4일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함께했다. 10월 8일에도 국무회의 발언 공개를 통해,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법 개악을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의 조정자

가 되겠다면서 군비를 계속 늘리고, 국군의 날에는 북한이 경계하는 전투기 F35A 비행으로 무력을 과시했다.

기업주들의 공개 불만과 입법 요구를 의식해 두 주류 정당들은 이번 주부터는 장외 대결 확대에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5일 집회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참석을 자제한 것이나, 한국당이 12일 주말 당 주최 집회를 취소하는 대신 9일 우파 집회에 개별로 참석한 것은 국회가 제 구실을 하라는 기업주들의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은 환상일 뿐이다. 시간·노력 낭비하지 말자

10월 8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검찰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다. 그밖에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 검찰 소환조사 최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특별수사부를 축소(일부만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특수부가 중요 수사를 할 때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수사 인력을 보강해 왔다.

친동생이 검찰에 강제 구인되고, 처가 소환조사를 받는 시간에 자신의 일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고 소환조사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문재인이 진작부터 내놓은 검찰 개혁안의 핵심이었다. 사실, 검찰이 역량을 동원해 벌이는 직접수사는 모든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여야들 다에게 유(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적폐 청산 명목으로 윤석열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방대한 인력으로 박근혜·이명박 등을 수사할 때는 검찰을 찬양했다. 이 수사 덕분에 문재인 지지율도 도움을 받았다. 검찰은 또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조국을 무혐의 처분했었다. 결국 문재인은 윤석열을 극찬하며 검찰총장에 파격 임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자기 사람들을 겨누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개혁’이라며 다시 내놓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첫해에 검찰에게 여당을 포함해 성역 없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하라고 했었다. 그때 문재인과 친노 정치인들도 타격을 받았다. 이들은 그 일로 오히려 검찰 개혁의 명분이 실추됐다고 종종 후회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비리” 등에 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허용된다. 이미 검찰에 매우 타협적인 것이다. 조국의 발표안도 윤석

열이 발표한 개혁안과 대동소이하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과 경찰을 견제한다면, 공수처 검사들은 누가 수사하고 견제하느냐는 물음이 던져진다. 별장 성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검찰)이나 버닝썬 의혹의 윤규근 총경(경찰)에 대해서 검찰·경찰 모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일을 보면, 당연히 나올 의문이다.

체제 수호 기관

검찰·경찰 등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핵심 권력기관인 것은 이 기관들이 아래로부터의 도전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출된 정부에 어떤 때는 충성하고, 어떤 때는 그와 충돌하는) ‘정치검찰’의 진정한 의미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그런 힘을 발휘한다면, 경찰은 수사권과 치안·경비 기능을 맡아 그렇게 한다.

이런 본질적 성격 때문에 설령 기능 조정·이관으로 한 기관을 약화시킨다고 해도 이런 기능들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 안

에서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없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 낸다고 해도, 경찰이나 특별경찰 등 새로운 기관들의 권력이 그만큼 강화될 뿐이다.

조국이 2018년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건이었다. 조국은 대공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을 내놨다. 애초에 국정원과 연계된 경찰 보안 수사대가 국정원 경력직을 채용해 계속 합법적으로 대공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사실 그조차 실행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민중당 쪽에 끼나풀(첩자)을 침투시킨 일,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늘어난 일 등이 버젓이 벌어졌다. 최근 국정원 첩자 건을 최초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자는 보도 전에 관련 제보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묵묵부답 반응이어서 보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미디어 오늘>).

대공수사권 이전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사실상 경찰 수사권 강화 조치다. 경찰의 본질(부패와 만행)과

그 역사를 볼 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진보적 개혁이겠는가.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거의 절반이 경찰청 공무원 짓임이 공개됐다. 강력·절도·폭력·지능 등에서 모두 월등히 앞섰다.

또 다른 사례는 검찰 공안부 폐지 건이다. 이 계획에 따라 최근 이름을 공공수사부로 바꿨다. 하지만 이름만 바뀐 채 노동사건, 집단행동 사건은 그 부서의 소관이다.

검찰의 체제 수호 성격은 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가령 2017년 산재 사망자만 1957명이나 됐는데, 기소된 건은 185건이고 그 흔한 구속기소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기소율은 일반 형사범죄 평균인 45.7퍼센트의 5분의 1에 불과한 9.5퍼센트에 불과하다.

어리고 힘없는 서민층 소년들을 고문하고 협박해 자백을 받아내어 살인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전북 완주 나라슈퍼 사건을 봐도 검찰의 계급 차별을

▶ 3면으로 이어짐

▶ 2면에서 이어짐

보여 준다.(최근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도 그런 일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검찰 수사의 계급 편향은 검찰 개혁안 어디에서도 거론되지 않는다. 법원의 고위 판사와 검찰 고위 검사들은 (가족 배경과 혼인 관계 등을 통해) 평균 재산이 25억 원이 훌쩍 넘는 자산가들이다. 게다가 이들은 퇴직 후 대기업과 대형 로펌 등으로 옮기면서 전 관예우를 누린다. 따라서 사법 과정 전체에서의 계급 편향성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바뀔 수 없다.

한편, 검찰이 사법 절차인 형사소송 절차(수사-기소-재판-형벌)의 일부

이므로 검찰 개혁을 사법 개혁의 일부로 접근할 수 있다. 되도록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검·경 수사 과정의 진술보다는 재판에서의 진술을 우선하기, 배심제 도입, 노동계나 좌파에 대한 편향적 수사와 기소·처벌 완화하기, 재심 기회 확대 등등.

그러나 이 과정을 지배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의 상층 계급 편중성은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현대차 비정규직 판결처럼 대법원에서 어찌다 한 번 노동 친화적인 판결이 나와도 행정부가 기업자들을 강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게다가 사법 과정은 법 집행 과정의 일부인데, 애초에 나쁜 법은 사법

개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진실이 이런데도, 조국 일가의 위선과 특권을 묵인하자는 위선적 ‘검찰 개혁’ 기치가 진보적 성과로 이어질 리가 없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억압 기구로서의 성격을 완하시킨다는 의미에서 검찰 개혁은 어느 면으로 봐도 공상이다. 오로지 국가기관 바깥에서 노동계급이 독립적으로 대중 투쟁을 벌이며 체제를 위협할 때만 그것의 간접적·정치적 효과로서 부분적 절차 개선이나 일시적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결국엔 민주적 노동계급 기관들에 의해 다른 자본주의 국가기관들과 함께 해체되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탄핵과 지금의 차이

적잖은 사람들이 조국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우파의 공세를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과 유사하는 주장을 한다.

서초동 집회의 인기 팻말이 앞면에는 “이번엔 울지 말자, 이번에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 노무현·문재인·조국의 얼굴이 그려진 것도 이런 추론과 관계 있다.

그러나 조국을 둘러싼 갈등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한국당)과 민주당(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분리한 당)이 국회에서 노무현을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동적 의회 쿠데타였다.

당시에 사람들은 우파 국회의원 200명이 매우 사소한 일로 맘에 안 든다며 직접 선출된 지 1년 된 대통령을 제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1987년 항쟁으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 같은 민주적 절차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순식간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5만 명이 “탄핵 반대, 민주 수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시위는 반동적 의회 쿠데타를 막고자 한 것이다

호” 시위를 벌인 것이다. 국민 4분의 3이 이 투쟁을 지지했다. 이는 당시 노무현 지지율의 두 배였다. 우파는 역풍을 맞고 완전히 꺼져버렸다. 민주노동당도 총선에서 두드러진 성적 향상을 거뒀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조국을 장관에서 해임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정권이 우파 쿠데타로 좌지우지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조국은 개혁성 때문이 아니

라 계급적 특권 행사와 위선적 언행, 권력형 부패 의혹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다.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도 우파의 위선적 포퓰리즘 선동이 먹히는 것 때문인데, 우파가 교활하게도 계급적 특권에 대한 불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파로부터 문재인과 조국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비판하고 폭로하면서 계급적 불만을 대변해야 오히려 우파의 강화를 막을 수 있다.

우파 포퓰리즘의 위험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원조이자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인 우파 정치인들이 독재 타도, 특권과 부패 처벌을 외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조국 임명에 실망한 층이 다수이고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해도 한국당 지지율이 쉽게 오르지 않은 이유다.

그런데도 우파는 중도파 집권세력의 계급적 특권과 위선을 쟁점 삼아서 민 대중을 동원하는 포퓰리즘적 행태

를 보였다.

이런 우파 포퓰리즘이 통하는 것은 장년·노년층에서도 (새삼스런 말이지만) 계급 불평등과 불만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촛불의 정치적 분화

서초동 집회 참가자들은 반우파 정서가 공통 분모일 것이다. 민주당과 친문 정치인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우파 야당들과의 권력투쟁에 이들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당과 적폐세력의 복귀를 막으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우파 집회가 감히 ‘촛불’을

참칭하고, 서초동 집회가 태극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서로의 상징을 훔쳐오는 것은 두 집회에 지속적인 확장 동력을 창출할 진정한 대의와 명분이 없음을 보여 준다. 둘 다 지배계급에게 인정받고 투표를 위해 중도층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상징 훔치기는 우파(박

근혜) 정부 반대로 모였던 촛불의 정치적 분화를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운동 때도 박근혜 지지 태극기 집회로부터 태극기를 되찾아야 한다며 태극기를 들고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중적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그라들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이 이를 준비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분노를 대변하고 정부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2018년 6월 30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대안은 무엇인가?

애석하게도 노동자 운동의 대표적 조직들인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의 지도자들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중주의(좌우와 계급을 초월한 국민 연합) 전략을 추구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 지도자들은 민주당과 동맹을 해서 한국당의 재집권을 막는 한편, 선거제 개혁을 이용해 선거에서 성장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연립정부에 유리한 구도도 만들고 싶을 것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를 위기에서 구해 준 대가로 노동계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계산도 있을 것이다.)

양당 구도와 강요되는 진영논리 속에서 군소 진보정당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해도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 책임지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관련 기사: 본지 299호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조국 편든 정의당 비판)

민중주의적 국민 연합 전략에서 비롯하는 두길보기 정치는 단지 실책인 정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노동운동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중주의 전략은 진보적 개혁의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반동적 우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주당 정부의 개혁 배신에 분노한 수백만 명을 대변하길 거부하는 것이다. 정치적 경험이 적은 분노한 청년 세대 중 일부가 정의당 등의 태도를 보고는 진보·좌파 모두가 그런 걸로 여기고 “무당파” 또는 심지어 우파 쪽으로 후퇴하고 있다. 학생들의 조국 임명 항의 집회도 주최측의 정치만 보며 거리를 두지 말아야 했다. 오히려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거나 암묵적 지지를 보내는 보통의 학생들의 정서에 공감해야 했다.

둘째, 사회 전반에서 계급 양극화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공식정치에서 우파와 중도파의 진영 대결로 대변된다면, 양극화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파에게 유리하다.

셋째, 민주당과 친문 정치인들은 정의당 등을 이 국면에 이용하고 총선에서 지지하는 자신에게로 결집해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심지어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

사실 지금 우파와 중도파 각각의 대중 동원에 대응할 노동자 투쟁 동원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2년 전부터 문재인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회피해 온 결과다. 그런 소심한 방식으로 이미 운동의 잠재력이 억제돼, 현 정세에서도 주변부로 밀려나, 정세의 종속 변수 취급을 받고 있다.(그런데 일부 좌파들은 조국 대전이 저들만의 싸움이니 당면한 노동자 투쟁이나 집중하자는 식으로 핵심적인 정치 문제를 회피해 결과적으로 노동계 지도자들의 약점에 침묵한다.)

좌파가 조국 논란에서 취해야 할 입장을 공식화(정치화)하면, 한국당에 반대해 민주당을 편들어야 한다는 진영논리를 거부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해야 한다. 좌파적이고 투쟁적인 양비론을 취해야 한다. 한국당의 위선적인 조국 사퇴 요구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공상적인 검찰 개혁 요구도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조국 등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며,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에 맞서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이 좌파적·투쟁적 양비론은 물론 우파에 반대함으로 먼저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차등적이다.

특히, 조국 본인의 비리 연루나 권력형 부패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파와 똑같이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우파를 혐오하는 대중의 오해를 살 것이다. 그러나 권력형 부패에 조국 본인이 연루된 것이 드러난다면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가 드러났음에도 조국을 비호한다면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버렸다 해서 엄청난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공식은 두 진영 가운데에 서서 민감한 논쟁을 회피하는 회색 양비론과는 다른 것이다. 우파를 분명히 반대하면서도, 중도파 정부의 왼쪽에서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친자본주의 정당들로부터 노동계급 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거둬 노동개약을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초에 보인 잠재력에 비하면 투쟁들이 파편적으로 벌어지며 존재감을 못 드러냈지만, 노동운동의 사기는 괜찮은 편이고 진보적 정서도 여전히 강하다.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로 지배계급이 분열해 있는 만큼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싸우기에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로 마음먹고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4일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서는 하반기 국회에서 개악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동시에,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악, 지침 개정과 적극적인 친기업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말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돼 기업주들의 “애로 해결”을 더는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탄력근로제 확대 주문은 주 52시간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기 불황 시기에 기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고 노동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쥐어짤 수 있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히 일



10월 8일 멈춰라 노동개악!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례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

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해 관련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하겠다고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환경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 주고 기업 활동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당·정·청은 지난달 26일 각종 규제 특별예외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규제를 완화한 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악을 더한층 밀어붙일 태세다. 조국 사태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국회 논의가 지연돼 왔지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모두 노동개악에서는 한통속이다. 재계의 강력한 입법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본격화되는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의 광범한 항의가 조직되어야 한다.

박설

ILO 협약 기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서 다뤄진다. 노동계가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한 7월 31일 입법예고안 그대로다.

첫째, 이번 ILO 협약 기준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국제 노동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 등은 아예 빠져 있다.

둘째, 그나마 개선됐다고 하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인정도 매우 제한적이다. 해고자·실업자는 사업장 단위 노조의 임원·대의원이 될 수 없고, 사업장 출입도 제한된다.

공무원·교사의 노조 가입 대상에 해직자를 포함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정부가 당장 시행해야 마땅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등은 전혀 언급도 없다. 공무원의 경우 특정 직무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교섭과 쟁의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셋째, ILO 핵심협약 기준을 내세워 오히려 개악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사업장 점거를 일절 금지하

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을 노린다. 현행 법도 사업장 점거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업장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점거 농성, 파업 집회 등까지 모조리 불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물론, ILO 협약 기준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자유한국당은 역겹다. 국회에서 비준안과 관련 입법을 각각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이라 더한층 개악될 가능성도 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다. 정부는 얼마든지 전교조 합법화 등을 위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ILO 협약 ‘선비준’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 문제를 경사노위로 가져가고 국회로 떠넘기면서 피죄죄한 기본권 보장을 대가로 개악 입법을 추진해 왔다. 사용자들의 편에 서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 후퇴를 낳을 반(反)노동 사법 적폐를 늘리면서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하반기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박설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별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안을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결국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당과 보수 언론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비난했다.

우선, 감사원은 논란의 중심인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공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보다 80명 많은 192명(14.9퍼센트)이 공사에 친인척 재직자

를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친인척 비율을 강조해서 채용 과정에 조직적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뱀새를 풍긴 것이다. <조선일보> 등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고용세습” 의혹 사실로 확인”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와 자식들의 비리가 조국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친인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역겹다.

그러나 친척 중에 공사 직원이 있다는 사실이 채용 비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은 용역업체 이사나 노조위원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192명에게 채용 비리와 관련한 위법

성이 드러난 게 없다”고 정리했다.

조국 사태와 친인척 ‘채용 비리’

한편,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해임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다른 공공기관장들에게 주의를 준 것과는 대조된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탄성적자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기간제나 파견·용역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편 게 문제라는 것이

다.(서울시 정책은 정부보다 나은 것이지만 이것도 ‘온전한 정규직화’는 아니었다. 전환자 일부를 정규직 최하 직급(7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두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본지 225호에 실린 기사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 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해야 한다’를 보시오.)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흠집 낸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들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정규직화하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또한 감사원의 징계 위협은 다른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들이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핑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달리 진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번지르르한 말과 달리 정규직화 규모를 대폭 줄이고, 진정한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 채용이나 자회사 방안을 강요하고, 처우 개선도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데 말이다.

‘채용 비리’ 운운하지만 조국 일가족의 비리는 문제될 게 없다고하는 정부, 특혜와 비리의 화신인 박근혜를 옹호하는 우파들을 폭로하면서, 노동운동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강동훈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사라 베이츠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기사다. 비록 영국의 상황과 수치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 여성 약 100만 명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대체요법(HRT)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흔한 형태의 호르몬대체요법을 장기간 받은 여성들은 많으면 50명 중 1명 꼴로 유방암에 걸린다.

이것이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 〈랜셋〉이 실시해 8월에 발표한 새로운 연구의 결론이다.

이 연구는 호르몬대체요법으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애초 예상보다 2배나 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호르몬대체요법을 받고 유방암에 걸린 여성 10만 8000여 명을 조사한 전 세계 58개 연구의 자료를 검토한 것이다.

이 연구를 보면 호르몬대체요법을 오래 받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이런 결과는 호르몬대체요법을 받는 영국 여성 100만 명에게 충격일 것이다. 호르몬대체요법을 최장 5년까지는 받아도 안전하다고 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연구에 따르면 그 기간은 1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연구

옥스퍼드대학교 의학통계학·역학 교수 리처드 페토는,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해 호르몬대체요법이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성들이 확실히 알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저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호르몬대체요법이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국폐경학회는 호르몬대체요법의 위험성과 유익함을 함께 고려



폐경기 보전은 긴급한 공적 사안으로 취급돼야 한다

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국폐경학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호르몬대체요법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골격계·심혈관계에 도움이 되는 등 전반적인 이점이 있다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호르몬대체요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새로운 연구와 그 요법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영국폐경학회 사이에서 여성들은 무엇이 건강에 좋은 선택인지 근심에 빠질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호르몬대체요법에 쓰

는 알약, 패치, 젤, [피부 안에 심는] 임플란트 등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워졌다. 제약 전문지인 《유러피언 파마슈티컬 리뷰》 웹사이트는 공급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가장 흔히 처방되는 호르몬대체제 중 거의 절반은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고도 했다.

공급 부족 사태는 2018년에 시작됐는데, 몇몇 중국 기업들이 호르몬대체요법 패치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 때문에 벌어졌다.

호르몬대체제는 오늘날 공급이 부

족한 약 중 하나다. 공급이 부족한 약은 그 외에도 많다.

이제는 수십 종의 약이 “약가양허품목”에 들어간다. 여기에 포함된 약들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민의료보험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사들인다. 호르몬대체제의 원리는 [폐경기에 줄어드는] 에스트로겐 혹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호르몬대체제 부족 사태로 많은 여성이 고통받을 것이라 우려한다.

가장 흔히 알려진 폐경기 증상은 안

용어설명

폐경기

여성들이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는 과정으로, 생리가 멈추며 보통 45~55세에 온다. 보통 폐경기 증상은 생리가 멈추기 몇 달 혹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다. 폐경기 증상에 대해 의사들이 주로 내리는 처방은 호르몬대체요법이다.

● 폐경기 여성 중 47퍼센트는 폐경기 증상 때문에 하루 휴가를 내고도 그 이유를 상사에게 말하지 못한다.

● 폐경기 여성 중 42퍼센트는 예상보다 폐경기 증상이 심했다고 답했다.

● 관련 교육을 받은 생산 라인 관리자는 3퍼센트에 불과하다.

면 홍조지만, 폐경기 증상은 여성마다 다르고 어떤 여성은 그 증상으로 크게 고통받기도 한다.

불안

폐경기가 오면 두근거림, 불안증, 우울증, 건망증, 질건조증, 불면증, 성욕 감퇴 등을 겪을 수 있다.

여성 중 80퍼센트가 이런 증상 중 몇 가지를 경험하는데, 4명 중 1명은 증상이 꽤 심하다.

폐경기 보전은 공중보건 사안으로 다뤄야 마땅하다.

즉 폐경기 보전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약품의 원활한 공급도 개별 약사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호르몬대체요법이 일상적으로 폐경기 증상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전체 폐경기 여성 중 20퍼센트만이 호르몬대체요법을 받는다. 현재까지 호르몬대체요법은 폐경기 증상에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 처방이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긴급한 공적 사안으로 취급돼야 마땅하다. 슬며시 감추거나 여성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해치지 않는 대안을 찾는 연구에도 공적 자금을 투여해야 한다.

폐경기 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주들

폐경기는 대부분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오지만 더 일찍 오는 여성들도 있다.

45~60세 여성 노동자 수는 500만 명을 넘는다. 25년 전보다 2배나 늘었다.

따라서 심신을 뒤흔들 폐경기 증상을 견디며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여성들의 수는 꽤 상당할 것이다.

많은 경우 그들은 도움을 얻지 못한다. 스코틀랜드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한 노동자는 폐경기 경험에 대해

〈가디언〉에 기고했다.

사측인 국민건강보험은 합당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해주지 않았다.

“근무 교대 시간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마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듯, 게으름을 피우려 한다는 듯이 말이다. 공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참아. 참기 싫으면, 말 안 해도 알지?”

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장하는 법은 딱히 없다.

상업유통노동조(Usdaw)의 조사를 보면 여성 중 절반은 아파도 관리자에게 말을 꺼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성들이 폐경기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적절한 관리자 교육, 폐경기 휴가제, 탁상용 선풍기,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작업복, 융통성 있는 작업 환경, 조용한 휴게실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호르몬대체요법의 대안은 안전한가?

암 발병율을 높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모든 여성들이 호르몬대체요법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호르몬대체요법의 대안들이 더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체동등 합성 호르몬 대체 요법(CBHRT)은 여성들의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을 맞춤형으로 제작·투여하는 것이다.

사실 병원·의원 소속 약사들이 이 요법을 처방하곤 한다.

그러나 영국폐경학회는 이런 맞춤형 합성 물질이 보통의 호르몬대체요법처럼 규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영국폐경학회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하이담 하모다는 이렇게 말했다. “업계 전문가 모두가 합성 호르몬 요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요법은 안전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70호 / 번역 이원웅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세계경제가 또 후퇴할 것이라는 온갖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근저에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저자이자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경제가 사상 최고로 좋다! 가짜 뉴스들도 거의 다 이케 내 덕분임을 인정 한다!” 올해를 미국 경제가 121개월이라는 사상 최장 기간 동안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트럼프가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트럼프의 그런 모습을 보면, 노스요크셔에 있는 일류 놀이공원인 라이트 워터 벨리에 갔을 때가 생각난다. 거기에 가면 꼭 타는 롤러코스터가 있었는데, 공원 측은 그 롤러코스터를 꼭 “유럽 최장”이라고 홍보했다. 가장 높다거나, 가장 빠르다거나, 가장 신난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장 길다는 것이다. 장장 2268.3미터나 되는 트랙 위에서 설 سه 없이 달릴거리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 “최장”이 꼭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사실 다른 나라들의 처참한 성장률을 보면 미국의 느리고 꾸준한 성장은 그나마 나아 보인다. 2009년 이후 미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유럽 국가들)은 금방이라도 경기 후퇴로 침달을 뚫아며, 절름거리는 독일 제조업이 유로존의 경기 하강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제2사분기에 독일과 영국은 모두 경제가 추축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전통적인 핵심부 바깥에서는 브라질이 올해 무지막지한 경기 후퇴를 피해 “더블 덩”[후퇴한 경기가 또 후퇴하는 것을 간신히 면했

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국수주의를 공유하는 트럼프와 나란히 연설한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트럼프를 따라 둔화하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줄였다.

중국은 2008년 이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지 못했고 연간 성장이 6퍼센트로 떨어졌다. 이는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유럽 국가들)은 금방이라도 경기 후퇴로 침달을 뚫아며, 절름거리는 독일 제조업이 유로존의 경기 하강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제2사분기에 독일과 영국은 모두 경제가 추축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전통적인 핵심부 바깥에서는 브라질이 올해 무지막지한 경기 후퇴를 피해 “더블 덩”[후퇴한 경기가 또 후퇴하는 것을 간신히 면했

중국의 어려움은 중국으로 공산품이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미국 포함)에도 타격을 줬다.

미·중 무역 갈등은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치명적인 악순환에 빠지는지를 잘 보여 준다. 2008년 위기는 오랫동안 심화해 온 주류 신자유주의 정치의 위기를 가속화했다. 정치 위기는 트럼프 같은 인물이 집권하는 데에 도움이 됐고, 트럼프는 다시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여기에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향후

관계를 협상하지 않은 채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의 가능성이 더해져 극심한 공포가 일고 무역이 줄고 있다. 최근 OECD 보고서는 “특이한 지정학적 위험”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무역 정책을 둘러싼 긴장의 고조는 정책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뢰와 투자를 약화시키고 … 미래의 성장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어두운 전망

주류 논평가들이 새로운 세계적 경기 후퇴를 경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역 분장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배후에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는 무역이 위기의 “촉발점”일 수는 있지만, 대두하는 경제적 피로감의 근저에는 기업이 운의 국제적인 하락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문제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 특히 2008년 이후 등장한 “새로운 표준” 경제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 경제를 보자.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보다는 나아 보일지 몰라도,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최근의 성장은 과거의 더 짧은만 인상적인 성장에 비해 초라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경제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43퍼센트 성장했고,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의 더 짧은 호황기 동안에는 38퍼센트나 성장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겨우 25퍼센트 성장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3퍼센트에 그쳤다.

이런 통계는 오늘날 자본주의에 관해 두 가지를 보여 준다. 첫째, 곧 새로운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주기적으로 위기에 빠졌다. 지배계급 구성원들이 취하는 조처가 위기의 양상과 시점을 바꿀지는 몰라도 위기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두 번째 특징과 이어져 있다. 바로 지배자들이 위기를 지연하려 할수록 성장이 더디고 저조해지며 새로운 불안정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산업 국가들의 역사

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뚜렷한 패턴이 보인다. 어떤 시기에는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한다. 이 시기에는 이윤이 생산에 대거 재투입돼서 자본 축적 수준이 높아진다. 결국 이는 생산과정을 자동화해 노동자들을 기계 설비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급속한 성장은 금융 체제의 급속한 팽창을 동반했고, 성장기의 끝무렵이 가까울수록 금융 체제는 더 거꾸적인 경향을 보였다.

자기 파괴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듯이 이런 성장은 자기 파괴적이다. 마르크스가 분석하기에 체제가 낼 수 있는 전체 이윤은 체제가 착취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량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죽은 노동”(기계 설비나 원자재의 형태로 표현된, 과거에 들인 노동)에 대한 투자는 자본가들의 경쟁 때문에 [“산 노동”(노동자가 하는 노동)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빨리 늘어난다. 이는 결국 투자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게 한다. 그 결과 마르크스가 말한 악명 높은 “이윤율 저하 경향”이 나타난다. 신용 확장은 일시적으로 균형을 불합하고 자본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지만, 결국에는 위기가 찾아온다. 오히려 금융 불안정이 신뢰를 깨뜨리고, 갑작스러운 신용 수축을 일으켜 위기를 재촉할 수도 있다.

위기가 오면 보통 대량 실업, 임금 하락이 뒤따른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많은 자본이 파산하거나 채무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나쁜 자본은 해체되고, 약성 부채가 파괴돼 이윤율이 회복되고 새로운 호황의 가능성이 열린다.

20세기 중반에는 이런 패턴이 바뀌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자본주의 기업이 커졌다. 위기가 끝나려면 기업들이 파산해야 하는데 거대 기업들이 경제 전반을 지배하면서 그러기가 어려워졌다. 그런 기업이 파산하면, 지속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규모는 거의 20세기 내내 불어났다. 기업 규모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 위기 직후 조금 줄었다가, 그 후 30년 동안 계속 다시 커졌다. 금융이나 정보 기술 부문 등이 핵심이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인 마틴 울프도 이런 상황을 한탄했다. 마틴 울프는 1980년대 이래로 새로운 기업이 생기는 속도가 줄면서 경정이 줄고 경제가 독점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마틴 울프는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기업 규모의 증대와 잘 들어맞는 두번째 요인은 국가 개입의 증대다. 1930년대 이래 자본주의는 점점 “국가자본주의”, 즉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자본과 그 국가가 단단히 결합한 복합체들이 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옛 소련과 같은 나라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곳에서도 다양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국가와 자본의 복합체들이 세운 계획도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는 문제를 근절하지 못했다. 여전히 그 계획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적 수준의 무정부적인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 개입이 강화되자, 위기가 터지면 국가가 나서서 위기를 관리하게 됐다. 많은 경우 국가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조화하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려 했다.

국제 무역의 점진적인 증가와 자유화된 국제 금융 체제는 1930년대 이후에 두드러진 여러 국가 개입을 약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개입하는 양상이 일부 변화했다. 물론 정부 활동의 목표가 바뀌어도 전반적인 정부 지출의 규모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위기가 오면 보통 대량 실업, 임금 하락이 뒤따른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많은 자본이 파산하거나 채무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나쁜 자본은 해체되고, 약성 부채가 파괴돼 이윤율이 회복되고 새로운 호황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변화와 함께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남비적인 지출”이 늘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냉전 때 치솟은 군비 지출이다. 그러나 군비 지출보다 덜 어처구니없는 정부 지출도 있다. 이런 지출은 그 자체로는 이윤을 내지 않지만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고 체제의 재생산에 필수적이다. 이런 지출들은 성장률을 낮추고 체제가 위기에 빠지는 경향을 완화했다.

그 결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이윤율은 철저한 위기를 통해 회복되기는커녕, 여러 경기 순환에 걸쳐 서서히 떨어졌다. 그래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자본주의가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호황기를 맞이했고, 1980년대에는 침체로 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이윤율은 철저한 위기를 통해 회복되기는커녕, 여러 경기 순환에 걸쳐 서서히 떨어졌다. 그래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자본주의가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호황기를 맞이했고, 1980년대에는 침체로 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이윤율은 철저한 위기를 통해 회복되기는커녕, 여러 경기 순환에 걸쳐 서서히 떨어졌다. 그래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자본주의가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호황기를 맞이했고, 1980년대에는 침체로 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산업을 일부 구조조정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몇몇 조처들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윤율은 제2차세계대전 직후 수준으로 결코 회복되지 않았고, 경기 순환이 거듭될수록 더 낮은 수준에서 오르내렸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중심부 국가들은 점점 신용 확장과 금융 과열에 의존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했다. 국가

개입의 형태도 점점 금융화했다. 예컨대 2001년 미국 경제가 후퇴로 치달자 미국 중앙은행인 미국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깎아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 이 거품은 미국 경제를 한 번 더 전진시켰다.

2008년이 되자 금융 거품과 신용 확장으로도 낮은 이윤율을 상쇄할 수 없는 시점이 왔다. 위기가 터지자 국가는 일종의 “금융화된 구제”로 대응했다. 감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은 금융 부문을 위한 것이었다. 더 중요하게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렸다.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정책을 펴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금융 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자본 축적의 새롭고 강력한 중심지로 부상한 중국은 옛 자본주의와 새로운 자본주의의 요소를 결합했다. 중국은 투자 수준이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성장하던 산업 국가들을 능가했지만, 국가의 개입 수준도 매우 높았다. 과거 경제 대국들과 마찬가지로 빠른 투자 속도는 결국 이윤율을 끌어내렸다. 낼 수 있는 이윤은 한정돼 있는데 투자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도 세계경제로 통합되면서 경쟁국들처럼 금융 정책으로 성장을 지속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위기가 중국의 수출 기반 모델에 타격을 줬을 때 중국 정부는 막대한 양의 신용을 풀었다. 이것은 성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됐지만 대규모 약성 부채와 투기를 키웠다.

세계 도처에서 노동계급을 쥐어짜서 착취율을 끌어올리고 규제금융을 한 결과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런 조처 때문에 체제는 철저히 정리되지 못했고, 순전히 자본주의 논리로 볼 때 파산해야 마땅한 수익성 없는 기업들이 살아남았으며, 이윤율은 낮게 유지됐다. 그 결과 생산 활동에 대한 투자 수준도 계속 낮아졌다. 이런 이유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산성이 정체할 때 매력적이다. 투자의 둔화는 영국의 높은 고용률도 설명해준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니 더딘 성장조차도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그 일자리가 저질이고 저임

금인 경우가 많을 뿐이다. “새로운 표준” 경제의 특징은 극도로 낮거나 마이너스인 금리, 감세, 양적완화에 의존해 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체제를 운영하는 자들은 되도록 경제가 이런 처방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기록적으로 낮은 유로존의 금리가 “사실상 상시화”돼 새로운 금융 거품을 일으키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이런 조처를 되돌리기는 극도로 어려웠다.

실제로 9월에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새로이 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기존 금리를 -0.5퍼센트로 삭감했다. 미국연방준비은행은 이미 3개월 전에 금리를 삭감했는데, 트럼프는 더 깎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브라질, 인도, 남한, 멕시코 중앙 은행도 금리를 낮췄다. 일본은행은 이미 마이너스인 금리를 더 낮추려 들고 있다.

실제로 9월에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새로이 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기존 금리를 -0.5퍼센트로 삭감했다. 미국연방준비은행은 이미 3개월 전에 금리를 삭감했는데, 트럼프는 더 깎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브라질, 인도, 남한, 멕시코 중앙 은행도 금리를 낮췄다. 일본은행은 이미 마이너스인 금리를 더 낮추려 들고 있다.

경쟁

각국 중앙은행들은 점점 경쟁적으로 부양 정책을 펴고 값싼 신용을 장려하는 듯하다.

“새로운 표준” 경제의 또 다른 측면은 언제 새로운 경기 둔화가 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경제 상황에 대한 신뢰가 한동안 높아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중앙은행들이 성장을 지속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러면서 금융 체제를 더 불안정하게 하고 더 깊은 위기의 가능성을 열 테지만 말이다.

2020년 초나 그 후에 세계경제가 둔화하면 중앙은행이 꺼내 쓸 무기는 많지 않을 것이다. 2009~2010년에 취한 조처를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사상 최저이고 또 다른 양적완화도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물음은 이런 것이다. 또 다른 긴축 정책, 임금 삭감, 노동조건 악화, 실업률 증가로 노동계급이 체제가 실패한 대가를 기꺼이 대신 쓰러려 할 것인가? 수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환경 재앙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한다. 머지않아 이들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아만성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9년 10월호 번역 이원웅



자본주의의 아만성 체제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하는가

사진: 조지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록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홍도·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소탈민주의 정권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에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성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적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갇히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이라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부터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한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위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경쟁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기에 공개히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종·정치·권력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한때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사냥으로 권력들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갇히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이라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중요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본 아니라 청년 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멸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언을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 할다.

1949년 중국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에이드리언 버드

10월 1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거대한 열병식이 조직됐고, 어린이들은 뜻도 모르고 외운 애국가를 불렀으며, 윤이 나게 닦인 군사 장비가 전시됐다. 중국을 다스리는 억만장자들은 새 수제 정장과 드레스를 빼입고 우쭐거렸다.

이 국경절부터 며칠 동안 중국 지배자들은 중국이 이룬 엄청난 경제 변혁에 관해 열변을 토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아직 할 일이 많다고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해마다 국경절을 전후한 주말에 출근해서 국경절에 쉬는 만큼 일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기념행사를 보고 애국적인 노래와 연설을 들을 것이다. 불꽃놀이를 쳐다보며 경탄할 것이고, 민족단결을 외치는 공연에 빠져 시름도 일부 잊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더 밝은 미래가 오리라, 자신이 만든 소비재를 일부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 출근할 채비를 하면 어마어마한 불평등과 가난, 생태계 파괴, 부패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여성은 왜 자기가 아직도 이등 시민인지 자문할 것이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는 중국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농촌 지주, 군벌, 부패하고 악랄한 국민당 정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당은 곧 대만으로 달아났다. 물론 중국의 옛 질서와 함께 제국주의 지배도 끝장났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지만, 민족해방과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자마자 벌어진 중국 혁명은 서방 진영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에서 공화당은 “중국을 잃어버렸다”며 트루먼 민주당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고, 여기에 고무된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조지프 매카시는 몇 년 동안 반공 마녀사냥 광풍을 이끌었다. 여기서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다운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중국 혁명의

뿌리는 매카시가 공산주의자들이 온상이라고 주장한 미국 국무부가 아니라, 중국 사회와 제국주의 침략에 있었기 때문이다.

혁명의 뿌리

혁명이 일어나려면 의식적인 사회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결정, 조직,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혁명의 뿌리는 심층의 사회구조에 있기 때문에, 혁명은 프랑스의 위대한 역사가 페르낭 브로델이 말한 “장기적인 안목”(longue durée)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1820년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었던 중국은 서구 제국주의의 손아귀에서 굴욕을 겪었다. 조차지가 서구 열강에게 양도됐다. 서구 열강은 상하이나 홍콩 같은 해안 도시와 점령지를 발판으로 군사력을 이용해 중국 경제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하려 했다. 서방의 인종차별주의가 굴욕감을 더 키웠다. 상하이의 유명한 서양인 전용 공원에는 “개와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었다.

복종을 감내하는 음울한 분위기가 만연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중국 황제와 제국주의 둘 다에 맞선 반란이 주기적으로 일어나 구원을 약속했다. 1900년 의화단 운동은 8개국 열강의 군대에 짓밟혀 패배했지만, 1911년 우창 봉기는 청나라 왕조를 끌어내리고 중화민국 시대를 열었다(1911년 신해혁명). 중국의 새 지배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승리하면 중국이 독립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굴욕은 1920년대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전 세계 식민지와 후진국에게 희망의 등대이자 혁명의 본보기가 됐다. 이를 배경으로 1921년 중국공산당이 창당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내 커다란 시험대에 올랐다가 실패한다.

1925~1927년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혁명적 운동이 특히 중국 동남부에서 전개됐다. 노동자와 농민 수천만 명이 동참한 이 운동은, 처음에 1925년 5월 상하이에서 영국이 시위대를 학살한 것에 대응해 서방·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는 민족주의적 요



1949년 중국 혁명에서 노동계급은 아무런 능동적 구실을 하지 않았다

구를 둘러싸고 결집했다. 외국 기업들에 맞서 파업이 벌어졌고, 영국 치하의 홍콩에서는 총파업이 1년간 지속됐다.

이 투쟁의 민족주의적 초점 덕분에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이 성장해 정권을 위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당의 민족 단결 요구는 급세 계급 적대의 제물이 됐다. 농촌에서는 농민이 자신을 직접 억압하는 지주와 고리대금업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도시에서는 노동조합원 수가 급증했고, 노동계급이 점점 독자적 이해관계에 눈을 뗄다. 파업은 이제 중국 자본가에게 대항해서도 조직됐고, 이는 민족주의의 핵심적 모순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새로 설립된 노동자 민병대가 1926년에 몇몇 도시에서 거리를 장악하자, 민족 단결은 자취를 감추고 노동자 혁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국민당이 피지배계급을 동원해 자기 목적을 추구하던 상황이 역전됐다.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대해 국민당이 취한 야만적인 대응은 국민당이 중국 자본가와 지주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줬다.

지방에서 국민당은 농민에 맞선 지주의 흉폭한 반격을 지원했다. 1927년 4월 국민당은 상하이 노동자들에게 총부리를 돌려 노동자 5만 명을 학살하고 노동자 조직들을 파괴했다. 다른 곳

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살해됐다. 학살 주범은 국민당이지만 노동계급이 무방비 상태로 습격을 당한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전략 탓이었다.

중국공산당

혁명적 상황 덕분에 중국공산당은 당원 수가 1925년 1000명에서 1927년 초 3만 명으로 늘어났다. 중국공산당은 특히 도시에서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고, 노동운동에 점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는 모스크바와 공산주의인터내셔널(코민테른,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촉진하고자 1919년 볼셰비키가 창건한 조직)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가 아로 새겨졌다.

소련의 고문들이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국민당의 당 조직 건설과 군사 훈련을 돕기 시작한 1924년에 이미 코민테른은 스탈린주의화하고 있었다. 스탈린주의가 국제 노동운동에 끼친 가장 큰 재앙은 바로 독일(나중에는 스페인)에서 파시즘 발흥을 막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초석이 바로 중국에서부터 마련되고 있었다.

스탈린주의는 새로운 러시아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이들은 1917년 이후 내전과 외국이 개입한 전쟁으로 노동계급이 거의 섬멸된 상황

을 배경으로 부상했다. 국가와 국유재산에 대한 지배를 기초로 한 그들의 권력은 1928년 볼셰비키 내 좌익반대파를 패배시키고 중앙집권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공고해졌다. 새로운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지배계급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원하기보다는 소련의 국익,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었다. 코민테른 역시 스탈린주의화했고 세계 공산당들은 소련 지배계급의 도구가 됐다.

소련에게 주된 위협은 서방 제국주의였다. 스탈린은 서방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되 소련의 통제를 벗어난 혁명적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당을 지원하고 국민당의 급진성을 보증해 주려 했다. 1926년 3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국민당을 “노동자·농민·지식인과 도시 민주주의 [부르주아지를 지칭하는 듯하대의 혁명적 연합”으로 규정하고 “동조 정당” [준회원]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는 파멸적이었다. 코민테른은 중국공산당에게 국민당과 동맹을 맺으라고 고집했다. 국민당과의 동맹은 결국 중국공산당의 독립성을 제약했고, 중국공산당이 노동운동에 자체를 설교하도록 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동맹자’가 1927년 4월 노동자들을 공격했을 때 노동운동은 스



1925년 광저우 노동자 파업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 이제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했다

스로 방어할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1925~1927년에 중국공산당은 사실상 국민당 좌파로서 처신했다. 오직 지도자 한두 명만이 동맹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마오쩌둥은 그러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국민당과의 동맹을 끝까지 지지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었다.

연속혁명

레온 트로츠키가 1905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발전시킨 연속혁명론은 러시아 같은 후진국이나 반주식민지의 자본가계급이 반동을 격퇴하고 부르주아 혁명을 완수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차르 체제 타도는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산업이 발전하고 노동자 운동이 밀집한 지역이 존재한다 해도, 농업이 우세한 사회에서는 변화를 추동할 분노가 대부분 농민에게서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농민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고 부농과 빈농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단결해서 혁명을 밀어붙일 수 없다. 혁명을 밀어붙이려면 노동계급의 집중된 힘과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자본주의의 존립에 문제가 된다. 노동계급이 결집하자마자 노동계급 고유의 이해관계가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로츠키가 주장했듯이 노동계급만이 부르주아 혁명을 완수할 유일한 세력이라면, 그 혁명은 급세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즉 혁명이 '연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트로츠키의 이런 분석이 정확했다는 점을 보

여 줬다. 비극적이게도 1925~1927년 중국에서 벌어진 일은 트로츠키의 이론을 부정적으로 입증했다.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은 트로츠키와 정반대로 주장했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옹호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했으며, 국민당이 제국주의에 제대로 맞서 싸울 것이라는 환상을 부추겼다. 급진적 사회변혁 강령만이 대중을 끌어들이고 "외부에 의한 군사적 패배로부터 혁명을 지켜 낼" 수 있었지만, 공산당은 운동이 방향을 잃고 국민당에게 학살당하게 내버려 뒀다고 트로츠키는 주장했다. 1931년 중국 동북부[만주]를 침략한 일본은 거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

1949년을 향한 대장정

1927년의 패배는 1949년 혁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1926년 소련 공산당 정치국에서, 국민당 지도자이자 장차 상하이에서 노동자들을 학살할 장제스에게 코민테른 명예 회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트로츠키뿐이었다. 1927년의 패배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 결별했지만, 충성 대상을 우한의 '국민당 좌파' 정부로 바꿨을 뿐이었다. 트로츠키가 며칠 앞질러 예측한 대로 1927년 5월 말 우한 정부도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마오쩌둥주의는 패배의 산물이었다. 상하이와 그 밖의 지역에서 자행된 도살은 중국공산당의 노동계급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살아남은 당원들을

다시 결집시켰지만, 그 후 공산당은 농민에 기반을 두고 도시 지식인이 지도하는 당으로 변해 버렸다.

초기에 생존자들은 국민당 세력이 비교적 약한 일부 농촌에 적색 기지를 세우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1930년대 초 국민당이 반격에 나섰다. 1934년 말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전략적·지리적 후퇴만이 살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대장정'으로 알려진, 참으로 대담한 모험이 시작됐다. 1934년 10월 10만 명가량이 출발했는데, 1년 후 국민당이 장악한 남부에서 멀리 떨어진 산시성 북부[옌안]에 도착했을 때는 8000명만이 남았다. 그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지주와 군벌을 처리하는 대단한 전술적 솜씨와 농민의 지지를 얻어 내는 능력을 보여 줬다. 마오쩌둥의 지도력이 확고해진 중국공산당은 산시성을 근거지로 삼아 병력을 복구하고 농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렸다.

산시성은 중국공산당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거점이기도 했다. 덕분에 공산당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얻었지만, 중국공산당의 관점은 여전히 철저히 스탈린주의적이었다. 1935~1936년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항일 연합 전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산당은 '노동자·농민 민주주의 독재'와 지주 재산 몰수 공약을 포기했다. 계급의 적과 동맹을 맺자는 제안은 유럽 공산당들의 인민전선 전략을 본뜬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자제시켰지만, 항일 활동 덕분에 대규모 세력으로 성

장할 수 있었고 1940년에는 당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 반면 국민당은 파벌 다툼에 빠졌고, 트로츠키가 예측했듯이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데에서는 한없이 무능했다. 영토 보전에 실패한 국민당이 국익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공산당의 홍군은 중국의 10퍼센트 이상을 장악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내전이 다시 벌어졌지만 1927년과 달리 형세가 뒤집혔다. 공산당은 이제 무장해 있었다. 국민당은 중국 영토의 9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중국인 다수는 커녕 자기 군대에게도 충성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1949년 10월 마오쩌둥은 권력을 잡았고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쳤다.

노동계급과 혁명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마오쩌둥이 이끈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다. 그가 1949년 10월 직전에 밝혔듯이 중국공산당의 목표는 자본주의를 고쳐 쓰는 것이지 뒤집어엮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홍군이 도시들을 해방할 때, 고위 장교들은 노동자들에게 직장에서 뛰쳐나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물론 중국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 없었다 해도 1949년 10월에 벌어진 일은 혁명이었다.

국민당이 지배하던 옛 질서가 무너지면서 제국주의 손아귀에서 중국이 당하던 굴욕도 끝났다. 그 결과 부국강병의 꿈을 실현할 기회가 찾아왔지만, 중국의 민간 자본은 너무 취약한 나머

지 필요한 자본축적과 투자를 수행할 수 없었다. 소련처럼 중국에서도 국가 기구가 하나의 경제적 세력을 이루었다. 고위 공산당 관료, 산업 경영자, 군장성 등으로 이뤄진 새로운 지배계급이 부상했다.

1949년 이후 나타난 주요한 변화와 국가정책의 우여곡절은 중국 통치자들을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성원으로 봐야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노동계급은 국가정책의 대상, 경제 생산의 원천이자, 거수기였을 뿐 자치나 정치권력의 근원이 아니었다. 때때로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경쟁하는 지배계급 분파에 의해 동원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배계급 내 다툼에서 승부가 결정되거나, 대중행동이 위에서 설정한 엄격한 한계를 돌파하려 하자마자 그들은 해산당했다. 1960년대 중반의 이른바 "위대한 노동계급 문화혁명"이 중요한 사례다.

'공산주의'라는 칭호의 이면을 보지 못하거나 국유화 뒤에 숨은 착취적인 사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1949년 중국은 스탈린 치하 소련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도 근본적으로 국가자본주의다.

중국 내에는 미래를 위한 희망도 있다. 홍콩에서든, 후난성에서든, [영국의 공업 도시] 헬리팩스에서든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7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노동자들은 자기가 당하는 착취를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며, 억압에 침묵하지도 않는다. 1976년과 1989년의 톈안문 광장, 1970년대 말 중국 전역으로 퍼진 '민주의 벽' 운동, 2007~2015년의 파업 물결, 오늘날 홍콩 투쟁 등에서 중국 노동계급은 자신들이야말로 중국 혁명을 완성할 힘을 지닌 유일한 세력임을 보여 줬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9년 10월호
번역 이재권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 ★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드러난 군사대국화 야욕
- ★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 ★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 ★ 연세대생이 전하는 연세대 '초단시간 청소노동자' 투쟁 등

서울대 생협 파업 승리에 이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무늬만이 아닌 진짜 정규직을 원한다”

서울대학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청소·경비, 기계·전기, 소방(이하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된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진짜 정규직화’와 ‘노조 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간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식 집회, 기자회견 등을 열며 “무늬만 말고 진짜 정규직 대우를 원한다”고 요구해 왔다. 기계·전기와 청소·경비 분회장들은 단식과 삭발까지 했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정년을 보장받았다. 서울대 당국은 이를 두고 “정규직 전환”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지속하고 처우 개선은 나몰라라 해 왔다.

서울대 당국은 기존 법인직(정규직)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법인직이 제공받는 각종 복리후생을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규 입사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정년은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60세로 단축했다.

올해 초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으로 학교 당국은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일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법인직들이 받는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지급 등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미흡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



60대 청소노동자가 식발하게 만드는 현실 10월 7일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삭발을 하며 서울대 당국에 항의했다

드라인’조차 명절상여금은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말이다!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60퍼센트 수준으로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1급 1단계’ 기본급을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전체 평균 임금을 시중노임단가에 맞추겠다

고 한다. 시중노임단가는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성격을 갖는데, 학교 측 방식대로라면 여전히 시중노임보다 임금이 낮은 노동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신규 입사자의 정년을 기존 노동자와 차별 없이 65세로 맞추고, 정년 이후 촉탁직 근무 기간도 1년 더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사망 사

건으로 공분을 사자,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기존 용역 시절에도 단체협약으로 보장받던 조합원 교육 시간, 간부회의 시간마저 못 주겠다고 하며 노조를 약화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10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하루 전면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이나 열악한 휴게실 실태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학생들의 연대 속에 성과를 거둔 것도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이시현 서울대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독자편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누는 대화, 활동과 투쟁 소식,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기사 제보는 02-777-2791이나 대표전화 02-777-2792로 연락 주세요.

ws@wspaper.org

조국 논란을 보며 — 진영논리에 위축될 필요 없어

나는 조국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그것의 책임자가 조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국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조국보다 사법개혁에 적절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문제는 민주당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로서 자신들의 부패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황교안도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조국이 못할 이유가 무엇이나고 말한다. 그 말은 우리도 썩었지만 그래도 저들보다는 덜 하니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영논리는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

다. 우리는 임명·사퇴와 민주당·한국당의 양분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법개혁이 꼭 필요하고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덜 부패했다고 해서 그들의 부패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부르주아 정당이자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세워진 정부’임을 자처했지만 집권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좌절시켰다. 노동개악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패가 대표적이다. 사용자 중심의 노동법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사회적대화기구를 만들더니 입법안 통과와 정당성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아픈 사람에게 어디가 아픈

지 물어보고 원래 약속한 치료까지 못 하겠고 약이나 처방해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다. 겉 좋아 보이는 진정제를 준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어찌 보면 한국당보다 비열하다.)

계급 문제

대한민국은 뻗속까지 아프다. 조국 사태로 수면 위로 떠 오른 부의 세습을 가능케 하는 불공정한 체제의 문제, 즉 계급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조국뿐만 아니라 나경원의 자녀도, 정유라도 이 체제를 이용했다.

현재의 집권 여당과 야당은 지배계급에 단단히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기반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들은 일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 권력과 소유한

자본을 유지, 정당화시키는 데 열중한다. 그것에 민주당은 예외가 아니다.

내가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 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러나 이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다. 민주당은 “조국 말고 누가 있어?”라며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는 듯이 국민을 협박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졸렬한 협박에 넘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두 가지 밖에 없어 보이는 선택지를 벗어날 것이다. 프레임을 넘어설 것이다. 사법개혁을 원하지만 조국 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이 이용한 불평등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지지할 것이다. 조국의 임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야당의 지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계급 불평등을 양산하는 체제에 반대한다. 우리에게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목소리가 아닌 불평등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의 주체가 필요하다. 나는 나의 의견을 표출할 창구로 <노동자 연대> 신문을 찾았다.

중요한 것은 지배계급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사고를 통한 ‘나’의 입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의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더욱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조국을 변호하지 말자. 조국 아닌 새로운 대안을 당당히 세상에 요구하자.

이란희 대학생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1심 계류자)

양효영

오늘(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9월 말부터 청와대가 톨게이트 사태 개입 의지를 표명한 이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도로공사와 노동조합들을 만나 왔다. 그리고 10월 9일 국회 본청에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박선복 한국노총 톨게이트 위원장 그리고 국토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이 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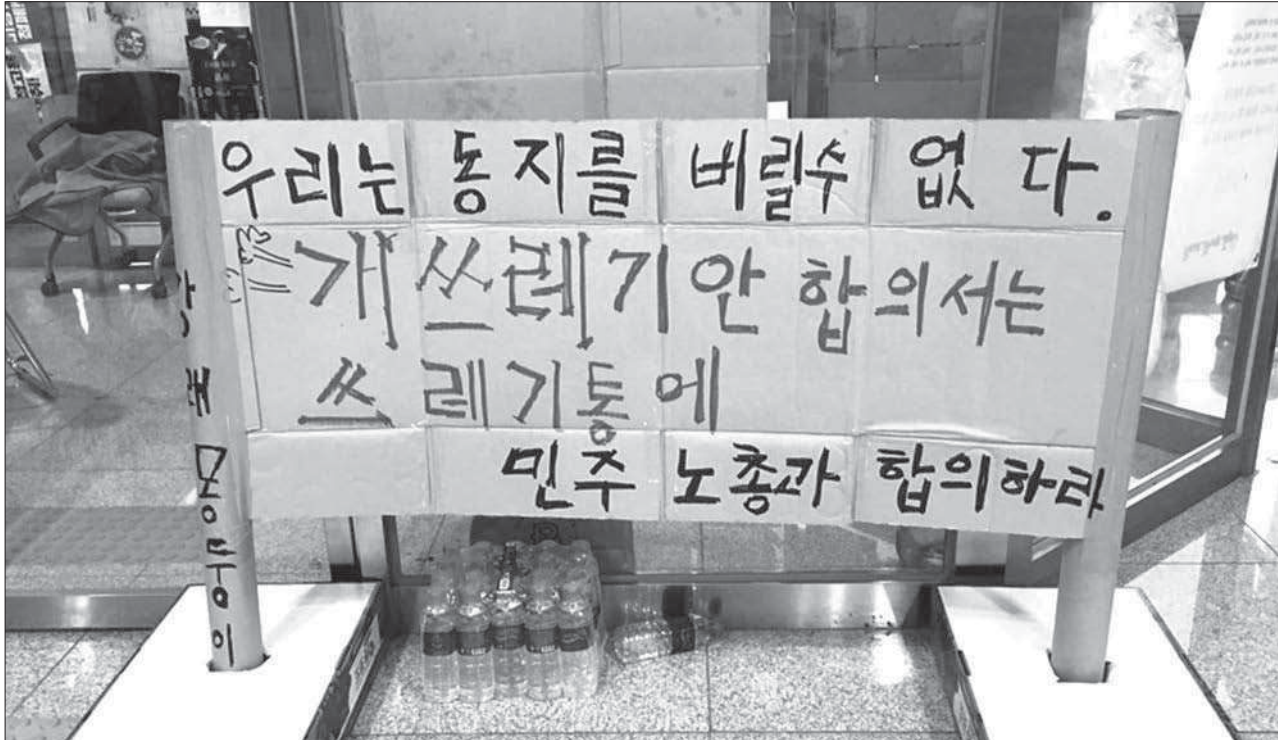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의 골자는 요금수납원 중 2심 계류자는 즉시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르되 판결 전까지 도로공사 기간제로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직접 고용할 수 있었다던 기존 도로공사의 방침에서 직접고용 범위를 2심 계류자(즉 1심 승소자)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 측과 또 합의된 것은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교섭으로 정해 나가는 것. 합의 후 이강래 사장의 유감 표명, 노조 측의 서울톨게이트와 도로공사 본사 농성 즉각 해제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안도 노동자들이 그동안 제출한 1500명 전원 즉각 직접 고용 요구에 한참 못 미친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 수납원 중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바라는 전원 직접고용도, 수납업무도 약속하지 않은 중재안

2심 계류자는 116명으로, 나머지 대부분(931명)은 1심 계류 중이다. 이 노동자들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다시 남게 됐다. 그러므로 투쟁하는 수납원 다수에게는 언제 날지 모르는 법원 판결을 또다시 기다리라는 것이다.

더구나 도로공사 측은 1심 계류자의 3분의 2가량 되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616명) 불법파견 요소가 없다며 소송에서 겨뤄 보자는 입장이다.

설사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재판은 당시의 사회적 세력관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안심하기도 어렵다.

교활한 도로공사 사용자 측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정년 초과 등으로 각하,

기각 판결을 받는 수납원들이 생긴다는 점을 노려 왔다.

교활

한편, 노동자들은 수납업무로 원직 복직을 원했지만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하더라도 기존 수납업무가 아니라 청소, 도로정비 업무 등을 부여하겠다고 해 왔다.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 배치 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이는 직접 고용하더라도 조건을 악화시키고,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할 수 없는 업무를 강요해서 적잖은 장애인들을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 중재안에서도 도로공사는 직무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노동

자들의 직무 관련 요구에 대해 아무 응답 없이 그저 노사 교섭으로 미뤘다.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공사 임시직(2년 이내 한시적 기간제)으로 고용한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임시직은 사측의 압력에도 취약할 수 있는 위치인 데다 최악의 경우, 2년 안에 1심 판결이 나지 않으면 고용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합의에 불참한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주 토요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결의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중인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중재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점거 중인 민주노총 노동자 다수가 “이런 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한 게 아니다” 하며 중재안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서명식 이후 을지로위원회는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중재안에 불만이 있는 일부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도 농성장에서 철수한다는 지도부 지침을 거스르고 도로공사 본사 농성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와 을지로위원회는 경사노위 2기 출범을 앞두고 이번 합의를 서둘렀다. 톨게이트 같은 상징적 투쟁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사회적 대화’ 재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조국 사태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보 행세를 하지만 정작 세월호 진상규명, 톨게이트 투쟁 등 이슈는 완전히 실종됐다는 비판적 지적들이 최근 늘었다.

하지만 ‘친노동’ 연막을 치면서도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의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공격하고, 노동법 개악 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또, 최근 감사원은 아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난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결과는 정부의 불충분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투쟁하게 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도 재를 뿌리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톨게이트 노동자 대다수의 직접고용을 미루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모두 즉각 직접 고용될 자격이 있다.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총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신정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 집배원 대폭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으로, 모든 집배원들은 우체국이 소재한 지역 규모에 따라 월 8만~12만 5000원을 받아 왔다.

우정본부는 올해 초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3개월간 보로금과 출장 여비 지급을 미룬 바 있다. 우정본부는 4월에 밀린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면서, 앞으로는 보로금을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세칙을 개악했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일단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월 10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우정본부는 위탁택배 업무 중 소형 물량에 대한 처리를 집배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를 통해 사측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위탁택배원의 임금은 그만큼 줄이고, 집배원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여려 한다. 사측은 이런 시도를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꾸준히 시도해 왔다.

최근 고양일산우체국이 이런 계획을 밝히자, 집배노조 고양일산우체국 지부는 10월 4일 우체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집배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소형 택배 전가 말라” 하고 반발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금도 노동강도가 상당한데 소형 택배 전가로 [물량] 20~30퍼센트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하고 규탄했다. “사측의 노동자 분열책에 맞서 위탁택배원들과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우정본부는 7월 8일 우정노조와 맺은 노사협정서에서 집배원 업무 경감과 보로금 증액 예산 반영 등을 약속해 놓고는, 되레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정노조가 파업을 철화했을 때 “충정을 잊지 않겠다”(국무총리 이낙연)고 하더니, 여전히 정규 집배원 증원과 토요택배 폐지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우정노조 집행부가 기층의 높은 열망(파업 찬성률 93퍼센트)을 배신하고 파업을 철화한 결과다.

집배노조는 10월 12일 서울 도심에서 “과로사 근절·임금 삭감 저지·정규 인력 증원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집회가 사측의 조건 공격에 맞서 투쟁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좋기로는 고양일산우체국지부와 같은 현장의 투쟁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다. 더불어 공동의 사용자에 맞서 위탁택배원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면 투쟁력은 배가 될 것이다.

별정우체국법 폐기하고
노동자들을 경력직 공무원화하라

전국의 우체국 3500여 곳 중 736곳은 별정우체국이다. 별정우체국은 1961년부터 도서·산간벽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민간인이 우체국장이다.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구가 적은 지방에 민간인이 사유재산으로 청사 등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전액 지급했다. 별정우체국장(공무원 6급)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국장 지위를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도 있다. 초기 설치비만 내면,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 받고 대대로 승계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별정우체국 집배원과 사무원은 무소불위의 별정우체국장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한다.

또한,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에 시달려 왔다. 별정우체국 폐국 시 당연히 퇴직해야 하며, 직급에도 제한을 받아 임금과 퇴직연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국가가 운영 예산 전액을 투입하는 만큼 별정우체국을 국가가 인수하고 소속 노동자들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이정원

철도노조가 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충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월 11~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은 꽤 누적돼 왔다. 그간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고 고질적인 승진 적체로 장기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 최근 몇 년간 연차수당, 명절상여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신규 기관사들은 1인 승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철도노조의 '임금교섭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직장 생활 만족도 중 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와 이런 불만을 잘 보여 줬다.

누적된 임금 불만

사측은 올해도 돈이 부족하다며 4퍼센트 임금 인상 요구와 삭감된 수당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합의에 따른 승진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재화를 실어 나르는 핵심 공공 교통 서비스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열망이 크다. 노조가 이런 열망을 받아 안고 진지하게 투쟁하고 나서야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할 수 있다. 임금 인상 요구와 인력 충원은 둘 다 중요한 문제다.

이 점에서 철도노조 집행부가 노동법 개정에 따른 유급휴일 예산 증가분(450억 원)을 인력 충원에 사용하라는 양보안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투지를 꺾어먹는 일이다.

임금·노동조건 악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3조 2교대 근무체계를 4조 2교대로 개편하려면, 노조는 인력 4600여 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초과근로와 주기적인 야간노동으로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



'2019년 임금 정상 지급', '합의 이행', '고속철도통합' 등을 요구하는 8월 27일 철도공사 앞 집회

는 노동자들의 열망은 크다. 철도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인 2024시간(2017년 기준)보다 80~130시간 더 오래 일한다.

그런데 사측은 업무 강도를 높여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려 한다. 근무체계 개편을 틈타 역무 업무 인력 축소(사실상 역무 업무 외주화), 전기 사업소 통합, 변칙적인 교대제 등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흔히 사용해 온 수법들이다. 예컨대, 현대·기아차에서는 주야 맞교대 근무체계를 주간연속2교대제로 바꾸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휴게 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런 노동강도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가 사라진다. 근무시간이 줄어도 고강도 노동에 노출가 돼 퇴근 후 다음날 노동을 위해 휴식하는 것 말고는 여가를 즐길 수도 없다. 외주화가 확대되면 열악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결국 정규직의 노동조건도 악화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근무체계 개편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인력이 충분히 늘어야 한다. 각종 노동강도 강화 시도와 역무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이 보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임금이 삭감되면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다시 초과노동을 하게 돼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이 돈 몇 푼에 연연해 장시간 노동을 유지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구체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독립적이면서도 단호하게 싸워야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경고 파업이라고 밝히고, 사측과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중하순에 완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이 절실한 요구를 성취하려면 사용자와 정부에 만만찮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보를 얻어내기 쉽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직후 철도 운영과 시설의 통합, 양질의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약속해 노동자들의 적잖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기대에 뒤떨을 치며 대폭의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민자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KTX-SRT 통합에도 의지가 없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중단했지만, 정규직의 임금 인상은 억제돼야 한다고 한다. 인력을 늘리려면 그 비용을 노동자들끼리 나눠서 대라는 식이다.

이것은 단지 기재부 관료들이 문제여서만이 아니라 문제인 정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따라서 이런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다. 최근 조국 사태로 정부가 참예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해 싸운다면 불리하지 않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 등 중요한 노동계급 조직들이 우파의 부상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보며 정부에 맞서기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우파를 막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진영논리에 노동자 투쟁을 종속시키면, 진정한 개혁은커녕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도 제대로 맞서기 어려워진다.(본지 2~3면 기사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를 보시오.) 우파에 반대해 정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노동 개악에는 맞서 싸운다는 논리는 링에서 권투 선수가 한쪽 팔을 묶고 싸우는 것과 같다.

철도 노동자들은 2016년 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성취할 수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심화될 때 단호하게 투쟁해 촛불 투쟁을 촉발하는 구실을 했던 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었다. 정치적으로 투쟁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이번 철도 파업의 요구에는 직접고용과 자회사노동자처우 개선도 포함돼 있다. 자회사노동자들은 지난 9월 파업에 나섰지만 철도공사 사측은 완강했다.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무력화시켰다.

이때 철도노조 집행부가 대체인력 저지에 나섰다면 사측은 상당히 압박을 받고 노동자들은 자신감이 배가됐을 것이다. 전체 철도 노동자들이 규정지키기 투쟁을 벌여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하고 염호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연대가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 이번 파업 때는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철도 파업 때 광범한 지지를 얻은 경험이 있다. 정부의 '정규직 철밥통' 비난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가 철도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광범한 노동자, 서민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주장에 많은 청년들이 지지를 보냈다.

이번에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함께 비정규직의 요구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면, 구의역 김근과 김용균 노동자 사망을 보며 분노했던 광범한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래야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파고 들어 이간질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야말로 사용자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다.